

마크롱 정책의 파산에 대한 고찰 — 진보적 신자유주의란 가능한가?

유승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부소장

들어가며

프랑스에서 지난해 11월 17일부터 ‘노란 조끼 시위 le Mouvement des Gilets Jaunes’가 일어난 직접적인 계기는 마크롱 정부가 단행한 유류세 인상이다. 유류세 인상은 단순히 세수를 올리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친환경 정책의 일환이기도 했다. 프랑스는 2016년에 체결된 파리기후변화협약의 가입국으로서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그래서 마크롱 정부는 유류세 인상을 통해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한편 그 재원을 전기차 보조금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이 사안만을 놓고 보면, 프랑스 서민들의 거센 저항을 납득하기

어렵다.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는 것은 전 세계 환경 단체의 요구이자 대부분의 국가가 합의하고 있는 사안이다. 또한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5월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포퓰리즘의 도전으로부터 자유주의를 구원할 지도자로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당선되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하여 포퓰리스트로 지목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마크롱은 결국 시위대에게 항복했다. 마크롱 정부는 지난 12월 초 문제가 된 유류세 인상을 철회했을 뿐만 아니라 2019년부터 최저임금을 월 100유로 인상하는 등 시위대의 요구 대부분을 수용했다. 이러한 사실은 노란 조끼 시위가 마크롱이 추진하고 있던 정책 전반에 대한 반대였음을 보여 준다.

이 글은 마크롱이 집권한 후 1년 반 동안 어떠한 구도에 따라 정책을 추진했는지를 검토해 봄으로써 프랑스의 노란 조끼 시위의 의미와 파장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마크롱 정부의 정치적 지향

마크롱의 정책 구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프랑스의 정치체제에는 수많은 흐름이 존재하지만, 1958년부터 최근까지는 대체로 두 개의 정치 동맹이 각각 하나의 지배적인 정당으로 결집해 있었다. 프랑스코등사범학교École normale supérieure 교수인 필리프 아스크나지에 따르면, 자유주의자와 좌파는 사회당으로 결집해 있었고, 보수주의자들과 신자유주의자들은 공화당을 지지했다(Philippe Askenazy, *The Contradictions of*

Macronism, Dissent, Winter 2018).

전통적인 두 정당은 세부적인 정책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자유주의적이고 민주적인 유럽 통합에 우호적이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와서 유럽 통합에 반대하는 국수주의적인 극우 국민전선 Front National이 급부상하여 기존의 정치 구도를 위협하고 있으며, 좌파 측에서도 신자유주의적 유럽연합에 반대하는 흐름이 독자적인 정치 세력을 형성했다. 필리프 아스크나지 교수는 마크롱이 지배적인 두 동맹 체제를 해체시키고 자유주의자와 신자유주의자들을 한데 묶어 새로운 정치 동맹을 구축했다고 평가한다.

여기서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가 어떤 개념으로 사용되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자유주의에 대한 정의와 구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자유주의는 대체로 20세기로 넘어오면서,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자유방임적 혹은 고전적 자유주의(Classical Liberalism)에서 벗어나 자유의 신장에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자유주의의 내용 변화는 복지국가의 등장과 맥락을 같이하는데, 복지국가와 병존하는 자유주의는 미국에서는 근대적 자유주의 Modern Liberalism로 불리기도 하며, 유럽적 맥락에서는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를 포괄한다. 이에 반해 신자유주의는 자유방임적인 고전적 자유주의로의 복귀를 주창하면서 복지국가에 반대하는 시장 자유주의 혹은 자유 지상주의(Libertarianism)를 의미한다.

프랑스에서는 ‘개혁하자’라는 뜻으로 “근대화하자(moderniser)”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마크롱으로 결집한 정치세력들은 근대성에 대한 비전은 상이하지만 모두 프랑스를 근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유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근대성이란 대체로 소수자를 포함하여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갖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신자유주의자들은 근대성을 프랑스를 디지털 혁명의 창업 국가로 만드는 것에서 찾는다.

마크롱은 이 두 흐름에 포함되는 다양한 집단으로부터, 예를 들어 성소수자 조직에서부터 첨단 산업의 기업가에 이르는 다양한 집단으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집권에 성공했다. 그는 선거 기간 동안 여성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며 성평등 혐오주의자와 싸워 소수자의 권리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진보적인 지식인과 자유주의자들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전직 투자은행가로서의 경력을 살려 일관되게 친기업적 강령을 내세움으로써 신자유주의자의 지지를 받았다. 마크롱으로 결집된 정치세력들의 공통점이라면 소수자까지 포함하여 동등한 권리를 옹호하는 한편 개방적이고 다문화적인 프랑스를 지지하면서 유럽 통합에 우호적이라는 점이다.

이런 정치적 동맹에 힘입어, 마크롱은 유럽 통합과 이민에 반대하는 극우 민족주의자인 르 펜과 동성 결혼에 반대하는 보수 가톨릭 신자인 공화당의 프랑수와 피용를 패퇴시킬 수 있었고, 디지털 혁명에 부응하는 신자유주의적 시장 개혁을 내세워 신자유주의적 유럽연합에 반대하는 전통적인 좌파 후보인 장뤼크 멜랑송을 따돌렸다. 물론 그의 승리는 놀라운 것이었지만 압도적이지는 않았다. 마크롱은 1차 선거에서 24%의 지지를 받았지만, 르 펜과 피용도 각각 21.4%와 20%의 지지를 받았다. 만약 중도파인 프랑수아 바이루가 마크롱을 지지하면서 사퇴하지 않았다면 마크롱은 대통령 결선투표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면 자유주의자와 신자유주의자의 결합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마크롱의 캠프에는 이전에 사회당에 가까웠던 싱크 탱크뿐만 아

나라 신자유주의 싱크 탱크까지 합류했다. 마크롱으로 결집한 자유주의자들과 신자유주의자들은 자본주의의 힘, 기술혁신, 세계화가 너무나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프랑스가 이제까지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유지해 온 일자리 보호와 사회적 평등은 더 이상 유효한 정치적 목표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일치를 보았다. 이러한 일치가 가능했던 것은 신자유주의자들이 경제적 자유(시장 거래의 자유)를 정치사회적 자유의 기초라고 여겼고, 여기에 합류한 자유주의자들은 최소한 경제적 자유와 정치사회적 자유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자유로운 기업가 정신, 동등한 지위, 균등한 기회를 진보와 사회 통합의 새로운 동력으로 인식했다.

프랑스의 새로운 정치 동맹은 미국의 클린턴주의나 영국의 토니 블레어가 제창한 ‘제3의 길’과 유사하다. 15년 전 토니 블레어는 직접 진정한 평등은 “결과의 평등이 아닌 동등한 지위와 기회”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런 점에서 마크롱주의는 미국 민주당과 영국 노동당의 신자유주의화에 비교될 수 있는 현상이다. 앞서 언급한 복지국가와 병존하는 근대적 자유주의(사회민주주의)의 퇴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마크롱주의는 낸시 프레이저가 정의한 영미적 의미의 “진보주의적 신자유주의자”의 등장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진보적 신자유주의자인 힐러리 클린턴은 도널드 트럼프라는 포퓰리스트에게 패했다.

마크롱의 신자유주의 정책

마크롱이 지향했던 목표는 프랑스를 영미적인 신자유주의 체제로

재편하여 독일과 경쟁하는 것이었다. 프랑스의 복지체계가 제공하는 ‘결과적 평등’이 나태함을 조장하여 경제 활력을 떨어뜨린다고 보고, ‘기회의 균등’을 내세워 국가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루고 낮은 실업률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언론들은 마크롱의 개혁 정책을 ‘전격전’에 비유했다. 나폴레옹 3세 이후 가장 젊은 대통령의 탄생이라는 국민의 기대 심리를 활용하여 마크롱 정부는 모든 부문에서 동시에 주저함 없이, 기업계가 표방하는 슬로건인 경쟁력 회복과 투자 매력 향상이라는 표어로 집약되는 사안을 밀어붙였다.

마크롱 개혁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놀라울 정도로 급진적으로 진행된 데에는 신자유주의적 원리의 적용이라는 측면 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적, 제도적 요인이 추가되었다. 그 내용을 몇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자.

첫째, 마크롱의 정책에서 가장 파괴적인 변화는 노동시장과 관련되어 있다. 마크롱은 노동시장의 개혁을 추진하면서 두 가지 점을 내세웠다. 우선 디지털 경제의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의 촉진과 기회의 균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임노동자와 독립 계약자(자영자 및 특수고용노동자) 간의 직무 상태를 동등하게 한다는 전략을 추진했다.

마크롱의 개혁에 의해서 독립 계약자들은 민간 기업의 노동자와 동일한 사회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장차 독립 계약자, 정규직 노동자, 공무원 등의 연금 제도를 통일할 계획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책을 예산 증가 없이 실현한다는 데 있다. 이는 공무원 연금을 낮추

거나 자격 요건을 엄격히 하여 일부 혜택을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취업 센터의 제안을 두 번 거절하면 구직자수당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를 약화시켰다. 지난해 9월에 시행된 노동조례에는 고용주가 경고 없이 어떤 이유로도 직원을 해고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프랑스 노동자의 90% 이상이 업종 및 산업별 단체교섭의 적용을 받았지만, '노동 개혁'으로 기업은 업종별 개혁을 거부할 수 있는 여지를 획기적으로 늘렸다. 이때문에 다양한 보너스를 업종별로 공유하던 것이 줄어들었다. 또한 회사 차원의 새로운 약정이 이전에 합의한 노동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직원은 변경된 사항을 거부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혁으로 그것은 해고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노동자의 권한이 축소되었다.

노동 개혁의 직접적인 결과는 노동자의 상여금과 급여가 하향 압력을 받을 것이며 사업장 내외의 불평등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노동시장 개혁은 노동조합의 거센 반발을 받았지만 노조의 분열로 노동 개혁에 반대하는 집회와 파업의 빈도는 갈수록 떨어졌다. 또한 보수주의자들은 친기업 정책을 비판하지 않았고 사회당은 리더십을 상실했기 때문에 제대로 노동 개혁을 제어하지 못했다.

마크롱 정책의 두 번째 특징은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누리던 지정학적 이점과 경제금융적 자산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를 계기로 접수하겠다는 국가 전략에 의해서 더욱 급진화되었다는 점이다. 마크롱은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떠나면 프랑스가 미국의 핵심 동반자의 역할을 맡을 뿐만 아니라 파리가 런던의 금융적, 경제적 지위를

계승할 수 있도록 서둘러 체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낀 것 같다.

영국은 그동안 유럽연합 회원국의 이점을 이용함과 동시에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시함으로써 상당한 이익을 보았다. 영국은 유로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 및 통화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유지하면서도,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 유로존의 외환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2016년 4월 영국의 금융회사는 유로 외환 거래의 40%를 담당했다(프랑스는 5%, 독일은 3.5%).

영국이 이러한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1979년에 집권한 마거릿 대처의 신자유주의적 개혁 때문이다. 그녀는 노동조합 약화, 공공 서비스 및 공공시설의 민영화, 기업에 대한 각종 세금의 감면, 고임금 노동자 및 부유한 개인에 대한 세금 인하라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단행했다. 주식시장은 사유화로 인해 확대되었고, 법인세는 낮아졌으며, 금융 부문의 고임금 직원도 낮은 세금이라는 혜택을 누렸다. 세계의 은행과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유럽의 기업들이 대륙에서 런던으로 투자 및 일자리를 옮겼다.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는 1997년에 수상에 취임한 이후, 대처에서 시작된 보수당의 정책을 계승했다. 유럽연합 내 영국의 지배적 위치를 활용하여 ‘그림자 은행 시스템’ (규제에서 자유로운 금융 활동)을 발전시켰고, 영국 내에 있는 조세 피난처를 통제하는 것을 거부했으며, 2004년에는 유럽은행감독위원회를 런던에 설립했다.

마크롱은 대처의 정책을 수용한 토니 블레어를 모델로 하여, 영국이 브렉시트로 포기해 버린 지위를 프랑스가 차지하기 위해 빠른 걸음을 내딛었다. 그는 프랑스가 미국과 유럽연합의 교량 역할을 맡도록

하기 위해서, 2017년 여름 독일과 미국 간의 관계가 악화되는 동안 트럼프를 프랑스의 군사 퍼레이드에 초대하여 정치적인 큰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정을 굳건히 했다. 그리고 유럽증권거래위원회를 파리로 이전하기 위해서 강력한 로비 활동을 펼쳤다. 이런 노력으로 마크롱의 프랑스는 한때 영국 경제를 지탱해 주던 유럽의 금융기관을 위한 새로운 모델이 되었다.

노란 조끼 시위대는 마크롱을 “부자의 대통령”이라고 불렀다. 마크롱은 부유세를 폐지했으며, 130만유로의 금융자산(요트 또는 개인용 제트기를 포함해서)에 대해서도 세금을 폐지했다. 이 조치는 자산 1억유로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에게 연간 약 150만유로를 선물한 것이다. 소득에 대한 누진세는 비례세로 대체되었고, 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한 다양한 세금은 줄어들거나 없어진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들은 영국이 누리던 금융 허브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기 위한 전략의 산물이었다. 이 전략은 어느 정도 열매를 맺기도 했다. 골드만 삭스는 브렉시트 이후 금융 허브로서 프랑크푸르트와 파리를 꼽았으며, 다수의 최고 경영자들도 대부분의 직원들이 프랑스를 선호할 것이라고 인정했다.

마크롱의 전격적인 개혁의 세 번째 특징은 유로존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한 긴축정책의 토대 위에 있다는 점이다. 마크롱을 지지하는 정치 동맹은 유럽 통합주의자들이다. 사실상 마크롱으로 결집한 자유주의자들과 신자유주의자들이 합의를 볼 수 있었던 데에는 유럽 통합의 유지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유로존과 유럽 통합을 유럽이 제2차 대전 이후에 이뤄낸 합의라고 믿는다. 그래서 그들은 유럽연합에 반대하는 좌우의 세력을 포퓰리즘으로 통칭하고 있다.

마크롱은 유로존과 유럽연합을 위기에서 구할 정치인으로서 유럽의 엘리트들의 기대를 모았다. 프랑스가 이런 기대에 부응하여 유럽연합의 주도국으로서 유로존과 유럽연합의 안정을 이뤄 내기 위해서는 우선 재정 건전성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유로존은 경제적 상황과 무관하게 회원국이 재정 적자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유지될 수 있기에, 유럽연합의 지도부들은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게 강력한 긴축을 요구해 왔다.

따라서 프랑스의 신뢰성은 예산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 그래서 마크롱 정부는 공공 지출과 공공 이전을 크게 줄이기 시작했다. 주택 보조금은 2017년 10월 처음으로 줄어들기 시작했고 더 줄어들 예정이었다. 그리고 2019년 1월부터 퇴직자의 6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연금을 2% 줄일 것으로 예상되었다(마크롱은 ‘노란 조끼’ 이후 이 내용을 철회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지역공동체 예산을 지원하는 교부금도 삭감된다. 이 때문에 지역공동체와 비영리단체에서 젊은이와 장기 실업자를 위해서 제공하던 일자리는 이미 크게 감소했다. 그리고 공무원의 임금은 인플레이션을 상쇄하기 위해 인상될 예정이었지만 취소되었다.

마크롱이 프랑스 체제를 전면적으로 재편하는 개혁을 집권 1년 반 동안 급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류세가 프랑스 시민의 잠재적 불만과 불안을 폭발시켰다. 프랑스는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세계 2위일 정도로 세금이 소득재분배의 핵심적인 수단인 나라이기 때문에, 서민층이 조세 부과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납득하기란 쉽지 않다. 더군다나 그 조치는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진보적 명분을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프랑스의 노란 조끼 시위는 세금 인상에 한정된 불만

이 아니라 마크롱이 추진한 신자유주의적 개혁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신자유주의의 혜택은 세계화의 흐름에 승선한 파리로 대표되는 대도시 중심의 고소득, 고학력, 금융자산가와 금융종사자에 한정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류세 인상이 신자유주의에서 소외된 지방 및 대도시 주변의 서민층의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대중적 반란의 방아쇠가 되었다.

끝맺으며

마크롱은 포퓰리즘으로부터 프랑스와 유럽을 구할 자유주의자로서 기대를 모으며 집권했고 그의 정당인 레퓌블리크 앙 마르슈La République En Marche는 대선에 이어 열린 총선에서 공화당과 사회당이라는 전통적인 거대 정당을 물리치고 의회의 압도적인 다수석을 차지했다.

하지만 마크롱의 인기는 빠르게 식었다. 취임한 지 불과 5개월 만인 2017년 9월의 여론조사에서 전체의 약 55%가 마크롱을 “좋은 대통령”으로 간주하지 않았는데, 그 비율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마크롱과 유명 경제학자를 포함한 참모진들은 인기 하락은 곧 지나갈 것이라고 믿었다. 친기업 정책은 대통령 직의 후반기 동안 성장을 가져올 것이며, 그 결과로 긴축정책의 제약이 상쇄될 것으로 보았다. 아마도 브렉시트 이후에 프랑스로 몰려들 유럽 금융기구와 다국적기업의 투자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며 노동시장 개혁으로 국가 경쟁력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한 것 같다. 그리고 성소수자

여성의 인공수정을 합법화하는 등의 전향적인 정책으로 진보 세력의 지지를 되돌릴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마크롱은 2018년 12월 노란 조끼 시위에 무릎을 꿇고 시위대의 요구 중 부유세 축소를 제외한 모두를 수용했다. 이로써 사실상 마크롱의 정책은 좌초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통치 스타일도 대중적 저항을 일으키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마크롱은 테크노크라트의 정교한 제도적 설계를 통해서 경제와 사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오만함으로, 누구도 예상하지 않은 반란을 앞당겨 불러왔다.

하지만 그는 프랑수와 올란드 대통령이 이끌던 사회당 정부의 경제관료 출신이기에, 정치적 성향 면에서 영국의 대처 수상이나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에 비유될 수 있는 보수주의자는 아니다. 그는 클링턴과 블레어와 같이 자유주의가 갖는 진취성을 유지하면서 신자유주의와의 타협을 추구한 “진보적 신자유주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그의 실패는 ‘진보적’이라는 수식과 ‘신자유주의’가 양립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마크롱이 실패한 근본 원인은 “기회의 균등함이 시장 경쟁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사회적 정의를 자동적으로 보장할 것”이라는 신자유주의적 믿음에 있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믿음은 부모의 소득, 부, 건강, 사회적 자본이 개인의 기회에 결정적인 요인인 상황에서 결과적인 불평등 심화는 다음 세대의 진정한 기회 균등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다. 마크롱은 여성 권리의 보호를 주장했지만 약화된 노동권은 여성 노동자를 가장 먼저 위협할 것이다. 결국 프랑스 서민들의 거센 반발은 시장 경쟁의 무한정한 자유가 사회적 정의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의 진보성의 한계를 드러내 줬다.

더군다나 마크롱은 신자유주의적 믿음뿐만 아니라 통화 동맹이라는 신자유주의적 제도의 제약을 받고 있다. 빌 클린턴과 토니 블레어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통해서 약속했던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 주지 못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켰지만, 상당 기간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을 이뤄낼 수는 있었다. 그것은 두 나라가 모두 재정 및 통화 정책의 독자성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 유로존 유지를 위해서 긴축정책을 실시해야 하는 제약을 안고 있다. 자유주의자들은 유로존을 안정화하여 유럽연합을 유지하는 것이 전후에 이뤄진 자유주의적 합의라고 믿는다. 그래서 이 합의를 깨뜨리려는 정치세력은 좌우를 막론하고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로존을 유지하려면 경쟁력이 취약한 국가들은 긴축정책을 실시해야 하며 이는 전후 유럽의 또 다른 근대적 자유주의적 합의인 복지체계를 축소시켜야 한다. 마크롱이 클린턴과 블레어와 같이 조기에 정치적 좌절을 겪게 된 것은 유로존의 제약 때문일 수 있다.

결국 프랑스를 비롯한 서구권의 혼란은 근대적 자유주의가 국가를 통해서 보존하고자 했던 자유와 평등의 가치와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가 충돌하고 있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진보적 신자유주의'가 자기모순을 드러낸 것이다. 특히 유럽의 주요국들은 유로존이라는 신자유주의적 제도의 속박 속에서 현재의 혼란을 벗어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시대